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3차추경 심사 가속도 민주당, 3일 가결예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추진 35.3억 규모... 3조 이상 증액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심사를 개시했다.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당분간 보이콧에 돌입하면서다.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소속 위원 위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이위원장을 차지한 16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마친 뒤 열렸다. 상임위원 3차 추경 예비 심사는 전날(29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상임위원 예비 심사는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마쳤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예비 심사를 마친 16개 상임위 중 외교통일위·정무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운영위·국토위 등 8곳은 정부 원안이 가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포함된 상임위 8곳은 모두 3조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에서 감액 심사한 곳은 국방위·법사위 등 2곳이다.

예결위는 예비 심사를 마친 주요 상

임위원 예산에 대해 종합 정책 질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회부 등 절차에 따라 종합 심사한 뒤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3차 추경에 대한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는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태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중소기업·중견기업 등 500만 국민의 생계가 파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이 제출된 후 한 달동안 상임위원 간담회, 당정 협의로 추경 심사를 꼼꼼히 준비했다. 밤을 새우더라도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3차 추경 심사에 속도 내는 상황을 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7월 11일까지 시한을 조정할 경우 3차 추경 심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여당이 추경의 조속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자리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고용부, 가치소비 위한 '바이소셜 캠페인'

사회적경제기업 등 참여 선언식 개최

사회적경제 가치소비를 통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국제적 운동 '바이소셜(Buy Social) 캠페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일 사회적경제기업, 시민단체, 일반기업, 시민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대한민국 바이소셜 시작을 알리는 '바이소셜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언식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 오후 3시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바이소셜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면, 취약계층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환경

오염이 감소하는 등 자연스럽게 사회적가치가 실현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래 2012년 영국에서 시작된 캠페인이지만, 현재는 아일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러시아, 태국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관이 참여하는 바이소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소셜 국내 도입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날 선언식을 기점으로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경제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와 행사를 연다.

선언식에는 종교계와 NGO, 봉사단체, 재계,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등 바이소셜 참여기관뿐 아니라 가수 폴킴, 축구선수 이영표,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바이소셜 지지영상을 보내 참여한다.

/한용수 기자 hys@

# 한전,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사업 추진

이사회서 건설사업 단일안건 논의 총 사업비 4조... 발전소 2기 건설

한국전력공사가 인도네시아의 국가 전력 인프라 사업 재추진에 나선다.

한국전력은 6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논의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는 해당 안건만 단일 상정됐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국가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약 34억 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자카르타 인근에 1G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게 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



한국전력공사. /뉴스시

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불

거진 수익성 논란과 온실가스 생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점을 0.549로 책정한 바 있다.

한전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상 사업 타당성 기준치인 0.5를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평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측은 이 접수가 결정에 신중을 요하는 '회색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KDI의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 위한 표준지침에 따르면 종합평점이 0.45에서 0.55 사이인 사업은 회색 영역으로 분류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방통위, 아동·청소년 유튜브서 3시간 연속방송 금지

아동학대·성희롱 등 논란 커져 개인방송 출연 보호지침 발표

앞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3시간 연속 방송을 해서는 안 되며,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에 방송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이 불거지자 관련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30일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

우선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 할 콘텐츠 유형으로 신체적·정서적·심리적 아동·청소년을 확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등을 꼽았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콘텐츠 ▲사행 행위나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 특성에 따라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행위를 하는 콘텐츠를 선정했다.

또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이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 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지난 29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간의사위실에 코로나19 확산방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 7개 공설해수욕장은 7월 1일 본격 개장한다. /연합뉴스

# 전국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해수부, 코로나 예방·확산방지 일환

올해 여름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이전과 달라진 해수욕장 이용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선 해수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해수욕장에 가기 전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통해 이용객 혼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용객이 많았던 전국 50개 해수욕장에 대한 혼잡도를 일반 이용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해

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각 해수욕장별 크기와 이용객수에 따라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초록', 거리두기에 주의가 필요하면 '노랑',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빨강'으로 표시된다. 혼잡도 신호등이 '노랑'이나 '빨강'일 경우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7월 1일 10시부터 부산 해운대·광안리·송도·송정·다대포, 충남 대천, 강릉 경포대, 양양 낙산, 속초, 삼척 등 주요 해수욕장 10곳에 대해 우선 제공한다. 7월 15일부터는 50곳까지 확대해 9월까지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RPS 유연성 확대시행 산업부, 관리지침 개정

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이행할 때 차년도 의무량을 일부 앞당겨 이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유연성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관리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의 6%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개정된 지침은 발전사업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 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에너지 저장 장치(ESS)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육내 80%, 육외 90%)를 초과하면 해당월의 신재생 에너지 REC 가중치를 '0'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태양광 연계 ESS의 경우 최대 출력을 태양광 설비용량의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한용수기자